2017 지방직 9급 (2017 06.17. 시행)

행정학(B책형) 해설

공단기 행정학 전임 김만희 교수

〈마니쌤 총평〉

시험보느라 정말 수고많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늘 그렇듯 온고지신(溫故知新)의 마음으로 오늘 치른 2017 지방직 9급 행정학을 다시 살펴보고 일주일 뒤에 있을 서울시 9급 시험 및 하반기 시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난이도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지난 국가직 9급 시험보다는 살짝 높았습니다.
또한 이번 시험에서 가장 특징적인 사항은 행**정학적인 문장이 출제되었고 단답형을 요구하기보다는 행정학적인 사고를 하는 문제(14번)가 출제되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마니행정학이 추구하는 "리딩복습"에 가장 최적화되고 적합하게 출제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시험에서는 **총 13문제가 기본서에서 완벽하게 적중**하였고(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8번, 9번, 10번, 16번, 17번, 18번, 19번), 지방교부세 문제(17번)와 브룸의 기대이론과 아담스의 형평성 이론(9번) 문제는 지방직 대비 라이브특강 때 했던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의 방향은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많은 모의고사나 많은 문제들을 통해 문제풀이 훈련을 할 것이 아니라 **기본서 리딩복습을 통해 개념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하고 또또를 통해 나와야 할 내용만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제 서울시를 향해, 여러분의 합격을 향해 같이 달립시다!
마니행정학은 항상 여러분의 합격을 간절히 응원합니다.
다시 힘내시고, 홧팅!

문 1. 우리나라 행정환경의 주요 행위자들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주주의 원칙에 합당하게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 정부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고,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행정부의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④ 대통령은 국회가 확정한 본예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 ④

〈적중 페이지, 출제근거〉 2017 기본서 1권 p. 192~193 / 2권 p. 157

〈정밀해설〉

④ 우리나라는 예산주의 형식을 지니므로 대통령이 예산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문 2. 정부규제를 사회적 규제와 경제적 규제로 나눌 경우 경제적 규제의 성격이 가장 강한 것은?

① 진입규제
② 환경규제
③ 산업재해규제
④ 소비자안전규제

정답 : ①

〈적중 페이지, 출제근거〉 2017 기본서 1권 p. 36

〈정밀해설〉

②, ③, ④는 경제적 규제에 해당한다.

문 3. 조직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층제의 원리는 조직 내의 권한과 책임 및 의무의 정도가 상하의 계층에 따라 달라지도록 조직을 설계하는 것이다.
② 통솔범위란 한 사람의 상관 또는 감독자가 효과적으로 통솔할 수 있는 부하 또는 조직단위의 수를 말하며, 감독자의 능력, 업무의 난이도, 돌발 상황의 발생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정해진다.
③ 분업의 원리에 따라 조직 전체의 업무를 종류와 성질별로 나누어 조직구성원이 가급적 한 가지의 주된 업무만을 전담하게 하면, 부서 간 의사소통과 조정의 필요성이 없어진다.
④ 부성화의 원리는 한 조직 내에서 유사한 업무를 묶어 여러 개의 하위기구를 만들 때 활용되는 것으로 기능부서화, 사업부서화, 지역부서화, 혼합부서화 등의 방식이 있다.

정답 : ③

〈적중 페이지, 출제근거〉 2017 기본서 1권 p. 347~351

〈정밀해설〉

③ 분업(전문화)의 원리는 업무를 성질별로 구분하여 구성원에게 한 가지의 주된 업무를 분담시키는 것으로 기능·업무의 동질성을 기준으로 조직편성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업(전문화)의 원리는 부처할거주의를 유발하여, 부서 간 의사소통과 조정이 필요로 하게 되며, 훈련된 무능 등을 초래할 수 있다.
① 계층제의 원리는 조직에 있어서 직무를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등급화하고, 상하 조직 간에 지휘·명령·복종관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② 통솔범위란 한 사람의 상관이 효과적으로 직접 통솔할 수 있는 수를 말하는 것으로, 상관의 능률적인 감독을 위해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 부성화(부처편성)의 원리란 정부의 기능을 가장 능률적·합리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어떤 기준에 입각하여 부처를 편성할 것인가에 관한 이론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서로 연관된 업무를 묶어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기능부서화, 사업부서화, 지역부서화, 혼합부서화 등의 방식이 있다.

문 4. 공무원의 사기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무원 제안 규정」상 우수한 제안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지만, 상여금은 지급할 수 없다.
② 소청심사제도는 징계처분과 같이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했을 때 이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절차이다.
③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성과상여금제도는 공직의 경직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 인사와 급여체계를 사람과 연공 중심으로 개편한 것이다.

정답 : ②

〈적중 페이지, 출제근거〉 2017 기본서 2권 p. 38 / 111

〈정밀해설〉

① 우수한 제안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으며, 상여금도 지급할 수 있다.

> 공무원 제안 규정
> 제18조(인사상 특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출한 공무원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
> 제19조(상여금의 지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5급 이상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중앙인사관장기관에 둔다.

> 국가공무원법
> 제76조의2 (고충처리)
> ①공무원은 누구나 근무조건 또는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를 받은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로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④ 성과상여금은 경쟁원리를 도입해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전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의 일종으로 사람과 연공중심이 아니라 업무실적 및 직무수행 등의 결과를 특정하여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문 5.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부업무평가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②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③ 환경영향평가
④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정답 : ③

〈적중 페이지, 출제근거〉 2017 기본서 1권 p. 235

〈정밀해설〉

①, ②, ④ 「정부업무평가기본법」상 정부업무평가의 종류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특정평가,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가 있다.

③ 환경영향평가는 정부업무평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6. 정책분석에 있어서 문제구조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던(Dunn)은 정책문제를 구조화가 잘된 문제(well-structured problem), 어느 정도 구조화된 문제(moderately structured problem), 구조화가 잘 안된 문제(ill-structured problem)로 분류한다.
② 구조화가 잘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분석가는 전통적인(conventional)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③ 문제구조화는 상호 관련된 4가지 단계인 문제의 감지, 문제의 정의, 문제의 추상화, 문제의 탐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④ 문제구조화의 방법으로는 경계분석, 분류분석, 가정분석 등이 있다.

정답 : ③

〈적중 페이지, 출제근거〉 2017 기본서 1권 p. 235

〈정밀해설〉

③ 문제구조화는 정책문제를 정의하기 위해 문제상황을 검증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제의 감지 → 문제의 탐색 → 문제의 정의 → 문제의 구체화의 과정을 거친다.

문 7. 정책집행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집행연구의 하향론자들은 복잡한 조직구조가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도와준다고 주장한다.
②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이 구체적일수록 정책집행이 성공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주장이 있다.
③ 불특정다수인이 혜택을 보는 경우보다 특정한 집단이 배타적으로 혜택을 보는 경우에 강력한 지지를 얻을 수도 있다.
④ 배분정책은 규제정책이나 재분배정책에 비하여 표준운영절차(SOP)에 따라 원만한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답 : ①

〈적중 페이지, 출제근거〉 2017 기본서 1권 p.189 / 298~299

〈정밀해설〉

① 정책집행연구의 하향론자들은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위해서는 목표가 명확하고, 조직구조는 단순해야 하며, 계층의 통합성이 높은 안정적 조직 구조여야 한다고 본다. 또한 정책목표의 집행과정 동안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다.
②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이 구체적일 경우 이해가 용이하여 정책집행이 수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③ 불특정다수인이 혜택을 보는 경우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발생하여 강력한 지지를 얻기 곤란하다.
④ 배분정책은 집행의 루틴화가 가능하여 저항이 없고 반발이 없어 원만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문 8. 우리나라 정책과정 참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은 국회와 사법부에 대한 헌법상의 권한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며, 행정부 주요 공직자에 대한 임면권을 통하여 정책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② 행정기관은 법률 제정과 사법적 판단을 통하여 정책집행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③ 국회는 국정조사나 예산 삼의 등을 통하여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정감사나 대정부질의 등을 통하여 정책집행과정을 평가한다.
④ 사법부는 정책집행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상황이 야기되었을 때 판결을 통하여 정책의 합법성이나 정당성을 판단한다.

정답 : ②

〈적중 페이지, 출제근거〉 2017 기본서 1권 p. 192~193

〈정밀해설〉

② 법률 제정은 국회(입법부)의 권한이고, 사법적 판단은 법원(사법부)의 권한이다.

문 9.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 따를 경우 조직구성원의 직무수행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은?

① 내가 노력하면 높은 등급의 실적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치(expectancy)가 충족되어야 한다.
② 내가 높은 등급의 실적평가를 받으면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수단치(instrumentality)가 충족되어야 한다.
③ 내가 받을 보상은 나에게 가치있는 것이라는 유인가(valence)가 충족되어야 한다.
④ 내가 투입한 노력과 그로 인하여 받은 보상의 비율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공평해야 한다는 균형성(balance)이 충족되어야 한다.

정답 : ④

〈적중 페이지, 출제근거〉 2017 기본서 1권 p. 361

〈정밀해설〉
④ 아담스의 공평성(형평성)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문 10. 「공무원보수규정」상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 적용되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된다.
③ 기준급은 개인의 경력 및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책정된다.
④ 직무급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직무등급에 따라 책정된다.

정답 : ①

〈적중 페이지, 출제근거〉 2017 기본서 2권 p. 110

〈정밀해설〉
①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게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가 적용되지만 모든 공무원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대통령경호실 소속 직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호봉제를 적용한다.

공무원 보수 규정
제63조(고위공무원의 보수) ①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경호실 직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호봉제를 적용한다.
②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기본연봉은 개인의 경력 및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책정되는 기준급과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직무등급에 따라 책정되는 직무급으로 구성한다.

문 11. 기존 데이터와 비교할 때 빅데이터의 주요 특징이 아닌 것은?

① 속도(velocity)
② 다양성(variety)
③ 크기(volume)
④ 수동성(passivity)

정답 : ④

〈적중 페이지, 출제근거〉 2017 기본서 2권 p. 315

〈정밀해설〉
④ 수동성은 빅데이터의 주요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다.
▷ 빅데이터 3대 특징 ◁

① 속도(velocity): 정형화된 데이터를 넘어 정형 또는 비정형의 다양한 정보를 의미한다.
② 다양성(variety): 시간에 민감하여 실시간 스트리밍의 형태로 사용된다.
③ 크기(volume): 데이터의 처리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문 12. 분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업의 심화는 작업도구·기계와 그 사용방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② 작업전환에 드는 시간(change-over time)을 단축할 수 있다.
③ 분업이 고도화되면 조직구성원에게 심리적 소외감이 생길 수 있다.
④ 분업은 업무량의 변동이 심하거나 원자재의 공급이 불안정한 경우에 더 잘 유지된다.

정답 : ④

〈적중 페이지, 출제근거〉 2017 기본서 1권 p.349

〈정밀해설〉
④ 분업은 업무량의 변동이 심하거나 원자재의 공급이 불안정한 경우 업무를 세분화하기 어려우므로 분업을 유지하기 어렵다. 분업은 한 사람이 습득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의 횡적범위에 한계가 있으며 시간과 비용 등이 과다하게 소모되므로 안정성 및 능률성을 위해 필요하다.

문 13.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민영화하여야 한다.
② 공공영역을 일정 부분 축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이 약화될 수 있다.
④ 공기업 매각 방식의 민영화를 통해 공공재정의 확충이 가능하다.

정답 : ①

〈적중 페이지, 출제근거〉 2017 기본서 1권 p.404~413

〈정밀해설〉
①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즉,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관장·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3년 연속 최하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민영화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③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실적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⑧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관장·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② 공기업의 민영화란 공공부문을 일부 축소하여 민간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③ 공기업을 민영화할 경우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므로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이나 행정의 형평성을 저하시킨다.
④ 공기업을 매각할 경우 공공재정이 확충될 수 있다.

문 14. 「국가재정법」상 다음 원칙의 예외에 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① 수입대체경비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②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 국가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④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정답 : ④

〈적중 페이지, 출제근거〉 2017 기본서 2권 p. 166

〈정밀해설〉
④ 제시문은 예산완전성의 원칙(예산총계주의)을 의미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가는 2007년 국가재정법 당시에는 예외로 인정되었으나 2014년 국가재정법의 개정으로 예외에서 제외되었다.
①, ②, ③ 수입대체경비 초과수입, 현물출자, 차관전대는 예산완전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②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 및 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그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⑤ 삭제 〈2014.1.1.〉

문 15.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독립통제기관(separate monitoring agency)은 일반행정기관과 대통령령 그리고 외부적 통제중추들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며, 상당한 수준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누린다.
② 헌법재판제도는 헌법을 수호하고 부당한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행정에 대한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③ 교차기능조직(criss-cross organizations)은 행정체제 전반에 걸쳐 관리작용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참모적 조직단위들로서 내부적 통제체제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
④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는 옴부즈만적 성격을 가지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답 : ③

〈적중 페이지, 출제근거〉 2017 기본서 1권 p.383 / 2권 p.141

〈정밀해설〉
③ 교차기능조직은 행정체제 전반에 걸쳐 횡적지원 및 조정기능을 통한 관리작용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참모조직단위로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조달청, 법제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즉 교차기능조직은 내부통제기구로 완전히 독립되어 있지 않으며 계선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동의·협의함으로써 사전적 통제기능을 수행한다.
① 독립통제기관은 행정체제의 중앙통제조직을 의미하며, 독립성과 자율성의 성격을 지닌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소속으로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옴부즈만적 성격을 지니는 기구이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이 아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문 16.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세 탄력세율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신축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② 지방자치제도는 법령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지방 세목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정답 : ②

〈적중 페이지, 출제근거〉 2017 기본서 2권 p.347, 384, 403

〈정밀해설〉
② 우리나라는 조세법정주의이므로 종목과 세율을 조례가 아닌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는 세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① 탄력세율제도는 정해진 세율을 법률의 위임에 의해 대통령령 등의 명령이나 지방정부의 조례에 의해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신축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할 영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문 17.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교부세의 재원에는 종합부동산세 총액,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일부 등이 포함된다.
②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교부세의 종류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및 교통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④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정답 : ③

〈적중 페이지, 출제근거〉 2017 기본서 2권 p.395~396 /
지방직대비 라이브 특강 1강

〈정밀해설〉
③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①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 종합부동산세 총액, 담배개별소비세 총액의 20% 등을 재원으로 한다.
②, ④ 특별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국가적 장려사업 등의 이유로 교부한다.

지방교부세법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① 특별교부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1.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2.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3.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문 18. 조직의 배태성(embeddedness)과 제도적 동형화(isomorphis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 배태성의 특징은 조직구성원들이 정당성보다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려는 것이다.
② 조직의 제도적 동형화는 특정 조직이 환경에 있는 다른 조직을 닮는 것을 말한다.
③ 제도적 동형화에는 강압적 동형화, 모방적 동형화, 규범적 동형화 등이 있다.
④ 제도적으로 조직이 동형화될 경우 조직이 교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정답 : ①

〈적중 페이지, 출제근거〉 2017 기본서 1권 p.160

〈정밀해설〉
① 조직 배태성은 구성원들이 자신의 개인적 선호나 경제적 이익의 추구보다 사회적 정당성에 따라 행동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② 제도적 동형화란 사회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받는 구조와 기능을 닮아가는 과정을 말한다.
③ 제도적 동형화의 유형으로는 강압적 동형화, 모방적 동형화, 규범적 동형화 등이 있다.
④ 제도적으로 조직이 동형화되면 조직이 교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문 19. 우편사업, 우체국예금사업, 양곡관리사업, 조달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회계예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②「정부기업예산법」
③「예산회계법」
④「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답 : ②

〈적중 페이지, 출제근거〉 2017 기본서 1권 p.406 / 2권 p.161

〈정밀해설〉
② 우편사업, 우체국예금사업, 양곡관리사업, 조달사업은 특별회계로 운영되며「정부기업예산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문 20. 정무직 공무원과 직업관료 간의 일반적인 성향 차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무직 공무원은 재임기간이 짧기 때문에 정책의 필요성이나 성패를 단기적으로 바라보지만, 직업관료는 신분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② 정무직 공무원은 행정수반의 정책비전에 따른 변화를 추구하고, 직업관료는 제도적 건전성을 통한 중립적 공공봉사를 중시한다.
③ 정무직 공무원은 직업적 전문성(professionalism)에 따라 정책문제를 바라보고, 직업관료는 정치적 이념에 따라 정책 문제를 정의한다.
④ 정책대안을 평가할 때 정무직 공무원은 조직 내부의 이익보다 정치적 반응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직업관료는 본인이 소속된 기관의 이익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정답 : ③

〈적중 페이지, 출제근거〉 2017 기본서 2권 p.39~40

〈정밀해설〉
③ 정무직 공무원은 정치적 이념에 따라 정책문제를 정의하고, 정무직 공무원은 직업적 전문성에 따라 정책문제를 바라본다.
① 정무직 공무원인 정치인은 재임기간이 짧기 때문에 시간적 할인율이 높고 안목이 단기적이지만, 직업관료는 신분보장이 강하므로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